시중은행 자금조달 재개?… 9.3조 은행채 '발등에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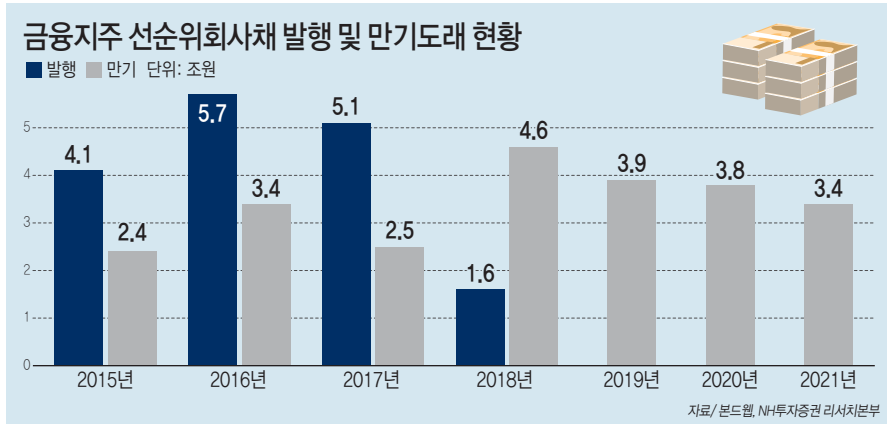
DTI·DSR 영향 외부 수혈에 신중
특수은행도 산금채 3.3조 예정
美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부담'

국내 은행들의 발등에 불(자금 조달)이 떨어졌다. 5월에 9조3000억원 규모의 은행채 만기가 돌아 오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대신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영업에 나선데 따른 자금 수요도 있다.

시중은행들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신규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여신이 줄자, 외부 수혈에 신중했었다.

1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5월 은행채 만기는 약 9조3000억원 규모다. 6월까지 확대하면 국민은행이 1조4000억원의 만기를 앞두고 있고, 우리·하나·신한은행도 각각 1조2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특수은행도 5월에 산금채 3조3000억원, 수출입은행채 1조4000억원 등 5조9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여건이 좋을 때 미리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본다.

최근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금리 역전'까지 감당하기는 부담이 크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쟁적으로 돈을 풀던 세계 주요국이 내년에 잇따라 '돈줄 죄기'에 나선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가산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올해 발행이 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Tier1 코코본드)의 가산금리는 낮아졌으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발행금리는 높아지는 추세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이 지난 4월 발행한 5년 콜옵션부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리는 4.08%였다. 이는 지난해 9월 3.77%에 비해 절대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시장 수요 증가로 가산금리는 지난해 9월 183bp(1bp=0.01%포인트)에서 올해 170bp로 낮아졌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발행 확대 여건도 마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코코본드 발행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코코본드란 발행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발행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되는 사채를 뜻한다. 은행지주회사는 지금껏 코코본드 발행 근거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코본드를 발행해 왔다. 이 때문에 비상장 은행지주회사는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없었다. 또 은행지주회사는 건전성 규제인 바젤3 자본인정 요건에 맞는 코코본드도 발행하지 못했다.

6개(신한금융·KB금융·하나금융·농협금융·DGB금융·BNK금융) 금융지주는 연초 후 지난 13일까지 2조 4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지난해 발행액 5조 4000억원의 45%에 달한다. 코코본드를 제외하더라도 2017년(5조1000억원) 발행 규모의 32% 수준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차환과 자회사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금리 인상 이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먹거리로 떠오른 중소기업 대출 수요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은행의 중소법인 대출은 34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5조6000억원(4.2%) 늘었다. 중소법인 대출은 2015년 말 320조4000억원에서 2016년 말 329조1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2.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 4% 증가율을 나타냈고, 올해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기업대출이 부실화하면서 곤욕을 치렀던 은행들은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중소·벤처기업 대출에 소극적이었다. 대출 기준도 매출액 등과 같은 정량 평가 위주였다. 지금은 달라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속속 도입된 데 따른 변화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中 반도체 굴기에 도시바 인수 좌초 위기

SK하이닉스 등 연합군 좌불안석
中 독점금지법 심사 승인 못받아
미국기업 관련 M&A 지연 견해도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매각이 중국의 독점금지법(반독점) 심사 승인을 받지 못해 2차 시한인 5월 1일을 넘겼다.

SK하이닉스와 도시바는 시한이 넘더라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성장의 방해가 되는 한미일 연합의 도시바 메모리 인수를 앞으로도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매각이 철회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1일 반도체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도시바의 반도체사업 매각 마감 2차 시한이 이날을 기준으로 넘겼다.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 매각안은 수급이 많은 주요 8개국에서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브라질, 필리핀, 대만 등 7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중국당국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중국 상무부의 심사 절차는 1차 시한인 3월 31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2차 시한까지 결국 지나가 버렸다.

중국이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 추측이 나온다.

가장 우선시 되는 이유로는 한미일 연합에 포함된 SK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 사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 아래 올해 낸드플래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D램 분야에만 강했던 SK하이닉스가 이번 도시바 메모리 인수를 바탕으로 낸드플래시 사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경우 사업 확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중국과 미국이 최근 국제 통상 질서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이 관련된 M&A 거래에 대한 검토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미일 연합은 베인캐피털이 주도하는데 미국 사모펀드라는 점에서다. 이런 이유로 미국 퀄컴의 NXP 인수도 미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한미일 연합의 도시바 인수, 퀄컴의 네덜란드 NXP반도체 인수 등 미국 기업이 관련된 M&A 거래 승인에 대한 검토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도시바가 도시바 메모리 매각을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제3회 사회성과인센티브어워드'에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도시바 반도체 인수와 관련해 최 회장은 "곧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강조했다.

도시바도 매각안이 무산될 위험에 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어떤 결정도 한 바 없다"며 "가능한 한 빨리 거래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매각이 중국의 독점금지법(반독점) 심사 승인을 받지 못해 2차 시한인 5월 1일을 넘겼다. SK하이닉스와 도시바는 시한이 넘더라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매각 철회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다. /도시바

그러나 SK그룹과 도시바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도시바메모리의 매각 작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도시바는 미국의 베인 캐피털, 한국의 SK하이닉스를 포함한 한미일 연합과 2조엔(186억 달러)에 반도체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반도체 시장 호황 속에 반도체 사업부의 가치는 최소 220억~240억 달러로 올랐다.

해외 투자자 일각에서는 매각 철회나 매각액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는 "도시바는 지난해 12월 6000억엔 증자에 성공해 재무 상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중국의 반도점 심사 지연은 매각 철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도시바와의 협상 주체가 베인캐피털이라는 점 때문에 상황을 관망하고 있지만 철회 가능성도 염두하고 낸드플래시 사업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수출 18개월만에 하락… 누적수출액은 '최고'

올 4월 우리나라 수출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8개월 만에 하락했다.

하지만 1월~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사상 처음 2개월 연속 수출액 500억 달러 돌파를 기록하는 등 수출 전선에는 아직 이상이 없다는 분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500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5%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수출의 경우 54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양플랜트 인도가 이뤄지고 5월 초 장기 연휴에 대비한 수출물량이 몰리면서 전년 대비 23.8%나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 4월 수출 증가율이 다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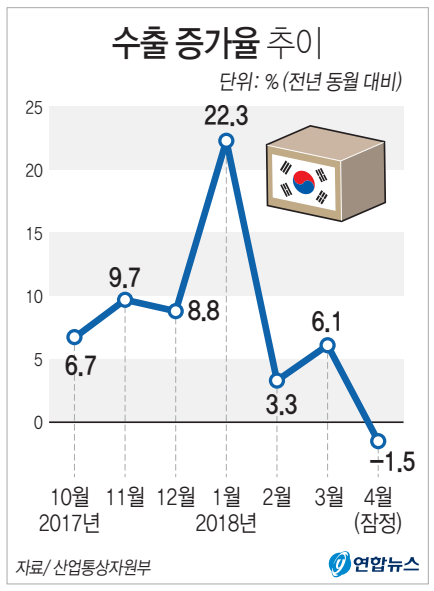
4월 수입액은 434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늘었고 무역수지는 66억1000만 달러로 7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4월 누적 수출은 지난해 보다 6.9% 증가한 1955억 달러로 1~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지난 3월 515억 8000만 달러에 이어 사상 처음 2개월 연속 수출액 500억 달러도 돌파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53.6%), 반도체(37.0%), 컴퓨터(23.5%), 일반기계(13.1%), 석유화학(11.7%), 자동차부품(6.6%), 섬유(6.0%) 등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97억8000만 달러로 역대 2위의 실적을 달성해 전체 수출의 19.5%를 차지했다.

반면, 철강(-7.4%), 자동차(-8.6%), 디스플레이(-16.2%), 가전(-20.1%), 무선통신기기(-40.7%), 선박(-75.0%) 등 6개 품목은 수출이 감소했다.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미국 판매 부진,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생산확대에 따른 단가 하락, 무선통신기기는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생산 확대가 수출 감소 원인이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잠정결론

금감원, 감리 완료·관련사실 통보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한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 상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특별감리에 착수했고,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핵심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을 둘러싼 분식회계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벌였지만 이 과정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안상미 기자